‘민주-혁신당 통합’ 광주·전남 국회의원들도 찬반 양론

대부분 대의·명분에는 동의
시기·절차·필요성에 이견
“지방선거 후로 미뤄야” 신중론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추진을 둘러싸고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합당 시기와 필요성, 절차를 둘러싸고 찬·반과 신중론이 엇갈리면서 당내 논란이 지역 정치권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3일 광주일보가 민주당 소속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18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하고 언론, SNS 등에 밝힌 내용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 의원은 통합의 대의와 명분에는 동의했다.

일부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합당 시기에 대해서는 입장이 달랐다.

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은 3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야 한다”며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에 집중해야 할 시점으로, 당내 갈등과 혼란으로 정부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합당 제안이 시중에서 회자되는 것처럼 ‘다음 대표 선거를 위한 포석’이나 ‘정무적 기획’이었다면 국민과 당원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합당이 지방선거 압승을 위한 카드라는 주장 역시 근거가 약하다”고 주장했다.

조계원(여수 을) 의원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합당을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신중론에 무게를 실었다.

문금주(보성·고흥·장흥·강진) 의원은 “지금 혁신당과 합당을 논의하는 건 반대한다”며 “합당에 대한 과정과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혁신당과의 합당에 찬성하는 지역 국회의원들도 적지 않았다. 일부는 합당 선언 과정에서 문제점을 비판하기도 했다.

박지원(해남·완도·진도) 의원은 “통합 찬성파다. 다만, 합당과 관련된 절차와 과정이 잘 못됐다는 지적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정청래 대표가 당 중진들과 간담회를 갖고 숙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흡수통합에는 찬성하지만 지방선거와 관련해 혁신당과의 협상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은 합당의 정치적 효과를 강조하며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보였다.

민 의원은 3일 KBS광주 라디오 ‘출발 무등의 아침’에 출연해 “큰 흐름에서,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다면 합당의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내란청산, 검찰개혁 등 대의적 목표가 크게 다르지 않고, 선거 연합보다는 한 당으로 선거를 치르는 것이 절차적으로도 단순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합당은 특혜도 배제도 없는 수평적 방식이어야 한다”며 “조국혁신당이 조건 없이 조기에 합당하겠다고 하고, 민주당이 당원 투표로 이를 결정하는 방식이 온당하다”고 강조했다.

권향엽(순천·광양·곡성·구례 을) 의원도 “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제안한 사안인 만큼 당내에서 합당 논의는 필요하고 시기적으로도 적절하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의원 개인의 의견은 이번 사안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당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진숙(광주 북구을)의원은 “장기적으로 합당은 필요하나, 현재 방식은 옳지 않다”면서도 “중차대한 시기에 합당 논의로 내부 분란을 키워서는 안 된다”고 말을 아꼈다.

이밖에 근본적으로 합당에는 찬성하지만, 당내 갈등이 격화하는만큼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어렵다며 개인 의견을 드러내지 않는 의원도 있었다.

정진욱(광주 동남갑) 의원은 “당론이 결정되면 따르겠다”며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듣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주철현(여수 갑) 의원은 “지역 당원들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 뒤 민주당 의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5·18 헌법 수록 위해 원포인트 개헌하자”

한병도 민주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개혁·민생입법 초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3일 ‘5·18 정신을 헌법전문 수록’을 위해 6·3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자,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빠른 시일 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사회 대개혁을 완수하겠다”면서 “이재명 정부 제1의 국정 운영 원칙은 ‘오직 국민 삶’이며, 민주당의 최우선 가치 역시 ‘오직 민생’이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사법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며 검찰개혁에는 한 치의 타협도 없다. 검찰청 폐지·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다”고 강조했다.

또 “사법개혁도 국민 눈높이에서 빠른 시일 내 완수하겠다”며 “3대 사법개혁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원내대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을 추진하겠다”며 “아울러 2월 국회 내 행정통합 특별법안 및 지방자치법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5개 자치구 관할 ‘광주특례시’ 전환해야”

이병훈 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 광주시의회서 회견

전남광주특별시 체제에서 광주의 역사성과 도시 정체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5개 자치구를 관할하는 ‘광주특례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병훈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3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 통합은 필요하지만, 광주를 지우는 방식의 통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수석부위원장은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광주의 역사성과 정체성, 상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며 “광주는 5·18민주화운동과 광주학생독립운동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고, 광주비엔날레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통해 국제적 문화도시로 성장해 왔다. 이러한 역사와 가치, 시민의 자부심이 법적으로 담보되지 않는다면 시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부위원장은 대안으로 광주특례시(가칭) 신설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기존 5개 자치구를 관할하는 광주특례시를 두고, 통합특별시 체계 아래에서 광주특례시와 산하 5개 자치구, 전라남도의 22개 시·군이 각자의 법적 지위와 기능을 유지한 채 협력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는 최근 광주시민과 시민단체들 사이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대안적 통합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

광주·전남 지역위원장 무더기 사퇴 ‘선거전’ 돌입

민형배·정준호·이개호·신정훈·주철현, 단체장 경선 레이스 합류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전남광주특별시’의 초대 수장을 뽑는 통합 선거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전남 현역 국회의원이 지역위원장직을 잇달아 내려놓고 선거 채비에 나섰다.

3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에 따르면 이날 민주당의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사퇴 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광주·전남 지역 유력 입지자들이 소속 시·도당에 사퇴서를 제출했다.

광주에서는 일찌감치 출마 의지를 다져온 민형배(광산 을) 의원과 정준호(북구 갑) 의원이 이날 광주시당에 지역위원장 사퇴서를 냈다. 전남에서도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신정훈(나주·화순), 주철현(여수 갑) 의원이 전남도당에 사퇴서를 제출하며 통합 단체장 경선 레이스에 공식 합류했다.

이들의 줄사퇴는 민주당 당규에 따른 절차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 및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규정’ 제31조 3항은 지역위원장이 시·도지사 등 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120일 전까지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2월 3일이 마지노선이다. 선관위도 이날부터 광역단체장 선거와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를 시작했다.

현역 의원 5명이 동시에 직을 던지면서, 이번 지방선거는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등 현역 단체장과 국회의원 군단이 맞붙는 ‘별들의 전쟁’이 될 전망이다.

‘전남광주특별시장’이라는 거대 타이틀을 놓고 체급을 키운 의원들의 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 같은 조기 과열 양상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현재 광주·전남은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통과를 비롯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 개헌 정국 등 정치적 명운이 걸린 중차대한 현안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의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할 현역 의원들이 지방선거 승리에만 몰두해 지역위원장직을 조기에 던짐으로써, 당원 관리와 지역 현안 대응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